



2017 구제역 사태가 남긴 과제



이혜진
축산경제신문 기자

‘물백신’ 논란 등 불안한 백신 정책
효능효과 입증 안 된 차단방역 고수
결국엔 농가책임방역으로 돌려
현장의견 반영된 개선안 마련해야

2010~2011년 구제역은 낙농업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수도권 소의 절반 가까이 땅속에 묻혔고 살처분 농가 인근에서는 끊임없는 곡소리가 이어졌다. 이때부터 낙농가들에게 구제역보다 더한 공포는 없었다. 살처분으로 인한 원유 감소를 해소하고자 증산정책을 펼쳤다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날뛰던 불안한 원유 수급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화마처럼 휩쓸고 간 자리를 메우는 일은 녹록치 않다.

잠잠하던 낙농가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부의 백신정책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한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올 초 젖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동안 돼지에서 종종 발생하던 바이러스가 젖소에 이어 한우까지 우제류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의 낙농가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것이다. 특히 발생 지역별로 상이한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당국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농가들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9건의 신고 이후 더 이상의 신고가 나타나지 않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에도 매년 반복

정부가 구제역 백신 정책을 도입한 지 5년이 지났다. 백신정책은 도입 초반부터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쌓여있다. 특히 낙농가들은 백신접종에 대한 부담감이 남다르다. 백신접종 후 유사산이나 산유량이 줄어들어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신에 민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렇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물음표다. 이번 구제역만 보아도 백신의 효능을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올 초 발생농가 및 확진 농가들은 공통적으로 항체형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백신을 접종했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효능이 없었던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투입된 긴급백신(O⁺A형)은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에 대한 중화항체 등의 백신효력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긴급백신의 경우에는 도입 후 사후 평가를 통해서라도 효능검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소에 대한 백신은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돼지에 대한 O형 백신들은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이 이행됐지만 소에 대한 O⁺A형 백신은 두 실험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이 사태를 두고, 수의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능과 효과보다도 백신을 농가 스스로 접종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의사도 접종하기 어려운 예방 백신을 농가 스스로 접종하고 있다고. 또한 백신 수령 후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살얼음이 생기는 경우 효과 없는

물백신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백신보급과 관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축산부에서 지역축협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 매뉴얼이 제각각이어서 농가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수의전문가는 “축산선진국의 경우 농장마다 계약을 맺은 전담 수의사가 1주일에 한 번씩 농장을 방문해서 농장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의사를 육성해서 농장주치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전문가들은 수의사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농가가 접종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다가 수의사와 농장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백신접종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백신접종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 접종은 부작용 우려가 많아서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소·돼지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하는데 일선 농가들 입장에서 너무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차단방역이 문제?

겨우내 소독을 하고 농가 차단 방역에 힘을 쏟고 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부가 축산농가가 방역 시설을 갖추고 방역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구제역 백신 수급에도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연구기관이 조사한 결과 축사시설이 갖춰야 할 방역시설의 부족과 운영 미비로 농가 단위 차단 방역에 한계가 있고, 백신접종 및 관리 소홀로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본적인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농가에서 가축사육 시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 및 행동요령을 포괄하는 구체화된 '농장차단 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연구진들이 내놓은 것은 결국에는 사전 예방 강화가 답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장차단방역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지자체가 모니터링, 혹은 관리를 해야 한다.

결국엔 농가 몫

이번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방역 체계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부와 농가의 사전방역 체계의 한계노출과 이에 따른 근본적인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AI·FMD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내세운 삼진아웃제 등이 개선안에 반영되면서 농가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5년 간 1회 발생 시 영업정지 3개월, 2회 발생 시 영업정지 6개월, 3회 발생 시 축산업 허가 취소 내용이 골자다.

또 개선안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인센티브·페널티 강화로 농가·계열화사업자를 컨트롤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책임 강화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과 차등지원으로 책임방역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은 방역 우수·미흡사항에 대해 차등 지원한다.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5년 이내 3회 발생 농가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AI·FMD 발생 농가 후순위 지원, 방역 의무 미이행 농가(미신고, 신고 지연 등)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

생산자들은 이 같은 개선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부는 이번에는 정책에 꼭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생산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

